

2024. 5. 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2133-3510
기후변화전략팀장	김태환	2133-3523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서울의 온도, 시민과 함께 낮춘다..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절반으로 감축

<2005년 대비>

-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로 시너지 높여

-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형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 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 이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제안, 설문,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 후 그에 따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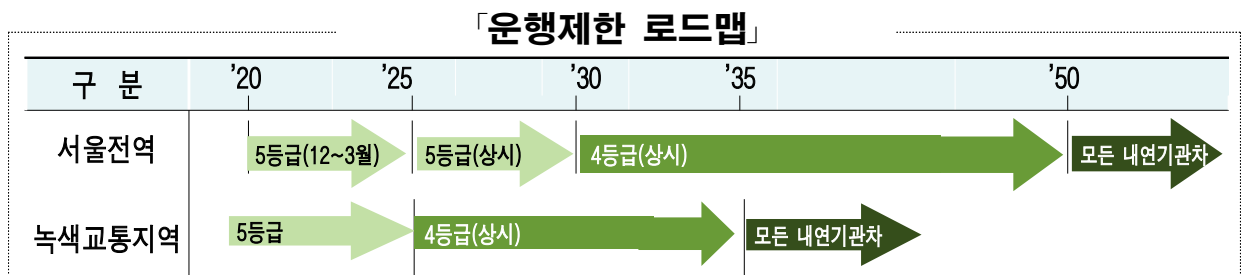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둘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 (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로 시너지 높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 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

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
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
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
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며 “2033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쉽지않은 목표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책임있는 결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